교육론의 눈에 잘 띠지 않는 함정(pitfall)

박 동섭(littleegan@gmail.com)

교육은 타성이 강한 제도이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수상에 취임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해서 의회의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과제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 교육 그리고 교육이다.”

영국의 사회적 부조의 근본원인이 교육에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에 ‘교육재생’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들었습니다. 왜 위정자들은 취임하면 일단 교육문제를 우선적인 정치과제로 드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채용해도 실정(失政)을 비난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타성이 강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입력의 변화가 있고 나서 출력의 변화가 결과로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빨라도 수년, 경우에 따라서는 십년, 이십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총리가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들었다고 해서 곧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치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십년 정도 총리 자리에 있으면 은퇴를 할 때에는 자신이 이십년 전에 도입한 교육정책의 옳고 그름에 관해서 실증적인 음미가 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3년의 재임기간으로는 정책이 성공하였는지의 여부는커녕 그 정책이 실시되는 것을 정권의 자리에서 보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것입니다(아베 총리는 실제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을 말하고 있는 한 정치가는 자신의 실정(失政)에 대해 비난받을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제언해도 그것이 실증적으로 ‘말도 안 되었다’는 것을 재임 중에 추궁당할 걱정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다지 정책에 자신이 없는 정치가들은 너도나도 일단 ‘교육개혁’을 입에 담습니다.

정치가뿐만이 아닙니다. 똑같은 논리가 교육을 논하는 모든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교육을 말하는 저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학개론이라는 수업시간에 줄기차게 교육을 논할겁니다만 그 논의 옳고 그름은 상당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육에 관해서는 자신이 말한 오류의 책임을 짊어질 리스크로부터 일단 자유가 되어 말하고 싶은 것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을 논할 때에 자계(自戒)의 말로서 처음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말한 것의 옳고 그름이 검증되는 리스크로부터 해방되어 발언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에 절도를 지키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교육을 말할 때 우리들은 무심코 과도하게 단정적이 된다” 이것이 ‘교육은 타성이 강한제도라는 것’의 두 번째 함의입니다.
‘타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둔하고 굼뜬 다는 것’입니다. 핸들을 꺾어도 감이 좀처럼 오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그럴 경우 우리들의 동작은 무심코 커지고 과장되기 십상입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라는 변명거리가 생기게 되고 우리들은 평소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관대함을 상실한 사람이 됩니다. 교육을 말하는 사람이 무심코 ‘뜨거워지기’ 십상이고, 과도하게 단정적으로 되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필요이상으로 비관용적이게 되는 것은 아마도 그 때문입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다

타성이 강한 제도인 교육은 거대한 돌이 내리막길을 데굴데굴 굴러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굴러가는 방향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굴러가는 큰 돌을 자신의 힘으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는 그대로 그 돌에 깔리고 맙니다.
교육을 멈춰 세우는 것은 어느 날 한 장의 법조문을 갖고 와서 ‘학교교육을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학교를 폐쇄하고 교사를 해고하고 커리큘럼을 전폐시키고 아이들에게 ‘다음 학교’가 정비될 때 까지 집에서 놀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학교교육을 완력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시도한 독재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택동과 폴 포트(캄보디아의 정치가)가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교육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의 1세기에 걸쳐서 국민의 교육수준에 괴멸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들은 역사로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육의 “빠르고 게다가 근본적인 개혁”이 실은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개혁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단 지금의 교육을 유지하면서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교육을 말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테크니컬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실로 많은 교육론자들이 이 테크니컬한 전제를 시야에 넣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와서 교사의 말에 얌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교육은 기능하지 않고 물론 ‘교육개혁’도 기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교육의 기본적인 일이 순조롭게 기능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습내용이 '유용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교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적법하게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교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들은 '잘못 된 것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아주 '병들어 있다'고 말하고 어느 날 "여러분 정치주도로 교육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부터는 교실에서는 의미있는것만을 가르치고 교사들은 어느 하나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라고 목청을 돋우어 선언해도 아마 아이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직적으로 뿌리박는 것을 통해서 '학교와 교사에 전폭의 신뢰를 두는 아이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인데도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교육에 관해서 발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금제도와는 그 점이 다릅니다. 연금의 경우라면 국민의 당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도 '안심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담당할 다른 기관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도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은 안심이다'라고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총선거가 닥치면 이론적으로는 "전부 바꿔"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 전부 새로운 얼굴이 되더라도 국회가 기능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갑자기 사직해서 '정치적 공백'이 생겨도 외교적 위기든 통화위기든 그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학교에 관해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하려고 하면 현행의 학교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공백 기간'을 두지 않는 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기간'은 확실히 국민의 지적, 정서적 성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변혁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상태가 나쁠 때에 '자동차를 운전한 채로 수리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죠. 누구라도 상태가 나쁠 때에는 엔진을 멈추고 수리공장에 맡깁니다. 그 동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로 통근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제도에 관해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육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고장 난 자동차를 탄 채로 고장을 수리'한다는 일종의 곡예에 비유할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교육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곤란하고 게다가 복잡한 조작을 필요로 하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교육을 개혁한다는 것은 학교에 대한 신뢰와 교사들의 지적, 정서적인 자질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학교제도를 신뢰하는 데에 부족한 점, 교사들의 지적, 정서적인 문제점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제도의 개혁해야 할 점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그것은 자동차를 고속으로 운전하면서 고장 난 곳을 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스피드』에서는 키아누 리브스가 시속 50마일로 질주하는 버스에서 폭탄을 제거하려고 고투하는 장면이 있는데 교육개혁은 그러한 복잡하고 정교한 조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의 제언의 대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이치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되기 십상입니다.

교육개혁의 주체는 우리들이다

많은 개혁론자는 '학교교육실패'사례를 가능한 한 많이 열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만으로 끝 이라고 말하는 논객도 있습니다). '여기도 나쁘다'. '여기도 고장이다'. '여기도 손도 댈 수 없다'....그러한 말만 되풀이합니다. 정치가도 평론가도 학교교육은 '안 된다'고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 덕분에 교육개혁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에 관해서 국민적 합의는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너무나 놀랍게도 그 교육개혁을 도대체 '누가'담당하는가에 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공적문제에 관해서 종종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눈에 잘 띠지 않는 함정(pitfall)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할수록 해결을 위한 일을 '누군가' 담당할거라는 물음이 반복됩니다. 즉 모두 "그만큼이나 중대한 문제라면 방치해 둘 리가 없다. 틀림없이 누군가 '책임자'가 나와서 제대로 처리해 줄 꺼야"라고 믿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중대하게 되면 될수록 그 하자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만으로 시민적 의무는 다한 것이다. 다음은 '누군가가' 그 뒷수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만큼 심각한 문제라면 개인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시민 한 명 한 명의 책무가 애매해지는 것이(경우에 따라서는 그 책무조차도 없어지는 것이)공적인 문제를 논할 때의 빠지기 쉬운 눈에 잘 띠지 않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명백히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말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일본에 만연하고 있는 일종의 '국민병'과 같은 것입니다. TV에서도 신문에서도 식자들이 예리한 세상비판을 펼치고 있는 덕분에 제도상의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가? 그

것에 관해서는 아무도 코멘트 하지 않습니다.
TV화면에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라고 미간을 찌푸리고 곧바로 “그럼 다음 스포츠입니다”라고 화제를 바꾸는 아나운서는 그런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아 이것은 내 일이다”라고 자각해서 황급히 문제해결에 나서는 목가적인 전개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회제도의 결함을 보정(補正)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책임자 나와!’라고 말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권재민의 민주국가에서는 사회제도의 결함의 책임자는 국민자신입니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자신의 일은 제도의 결함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뿐이고, 결함을 고치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교사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교육제도를 ‘새것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상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있는 기구와 있는 교사의 잠재적인 퍼포먼스를 어떻게 최대화하는가 하는 국민적인 과제로 수렴됩니다.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육개혁을 담당해야 할 현장 교사들의 잠재성을 어떻게 최대한 끌어올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란 무엇인가? 교사들을 상의하달조직 안의 ‘예스맨’으로 길러내는 것을 통해서 일까요? 교육기술을 매뉴얼 화하는 것을 통해서 일까요? 엄격한 근무고과를 실시해서 능력별 등급매기기를 통해서 일까요? 경험 풍부한 비즈니스맨이라면 그러한 인사관리정책은 ‘비용삭감’과 ‘불확정요소의 배제’는 가져오더라도 ‘퍼포먼스 향상’에는 연결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해야 할 것은 ‘비용삭감’과 ‘조직의 경직화’가 아닙니다. 현장의 교사들의 교육적 퍼포먼스를 향상시켜서 그들의 잠재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은 현장 교사들을 위해서 “늘 창의적인 활동이 충만한 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정치가와 미디어 지식인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생각과는 아마도 반대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교사를 불안하게 하고 겁을 먹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비굴한 존재로 할 것인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행 교육제도가 다양한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들 눈앞에 능력이 낮은 교사, 의욕이 없는 교사, 모럴이 낮은 교사가 있다는 것을 물론 인정합니다.(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질이 낮은 교사들을 포함해서) 갖고 있는 인적자원으로 어떻게

든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 있는 자원(les moyens du bord)'으로 꾸려나가는 것은 일단 눈앞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붕괴를 최전선에서 막고 있는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고 모럴이 높은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잠재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통해서 제도상의 여러 가지 하자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발명의 재능을 발휘해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고안하고 실험하고 논의하고 대화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생성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허용된 유일 가능한 ‘교육개혁’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다음의 내용만큼은 여러분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1) 교육제도는 타성이 강한 제도여서 쉽게 바꿀 수 없다.

(2) 따라서 교육에 관한 논의는 과도하게 단정적이고 비관용적이 되기 십상이다(제가 제기한 논의도 포함해서)

(3) 교육제도는 일시정지해서 근본적으로 보수할 수 없다. 그 제도의 하자는 ‘지금 눈앞에 있는 하자가 있는 제도’를 통해서 보정할 수밖에 없다.

(4)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사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비판받고 사정(査定)받고 제약받는 것을 통해서 그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지받고 용기를 북돋워 받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대략 이 정도를 저의 교육론의 전제로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 벌써 “당신이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조금 더 인내하시고 다음 장까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제가 왜 이러한 것을 제안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논리적 줄거리를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